



조전혁 등 성소수자 혐오 극우의 선거 약진은 위험신호

6·3 지방선거 서울 교육감 후보였던 조전혁은 선거 운동 내내 동성애 혐오를 선동했다. 그는 후보 현수막을 “퀴어 동성애 교육 추방”으로 도배했다. 특히나 학교 앞은 빠짐없이 그 구호를 선택했다.

조전혁의 핵심 지지 세력은 개신교 극우였다. 선대위원장이 윤석열 탄핵 반대 거리 집회를 이끌었던 손현보 목사였다.

조전혁은 서울 퀴어퍼레이드(퀴퍼)를 반대하는 개신교 우익들의 집회 주최 단체인 ‘거룩한 방파제’를 찾아가 지지를 호소했다. 심지어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축제 개최 반대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그의 선거운동은 동성애 혐오 그 자체였다. 이런 자가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 117만 표를 얻어 2등을 했다. 조전혁은 ‘보수 단일 후보’도 아니었다.

이는 성소수자와 그 지지자들에게 위험 신호다. 당장 이번 선거운동만 해도 조전혁이 여론조사에서 2, 3등이 되자, 누가 더 성소수자 혐오를 잘하나 경쟁하듯이 다른 보수 교육감 후보들도 조전혁을 따랐다. 이번 선거 결과로 극우가 고무받으면, 성소수자 혐오 선동을 더욱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재선에 성공한 서울시장 오세훈은 ‘윤어게인’과는 거리를 두면서도 개신교 극우의 성소수자 혐오에 동조해 왔다.

2023년 서울시장 오세훈은 2015년부터 퀴퍼가 개최됐던 시청 앞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했다. 그리고는 퀴퍼 방해 목적이 분명한 개신교 우익 단체에게 서울광장을 내줬다.

그런 오세훈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선한 것도 정말 속 터지는 일이다.

그동안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더 관대해지고 젊은 층에서는 편견이 줄어들어 왔다.

이번 선거 결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역전시키려고 ‘빌드업’하고 있다는 경고 신호이다. 성소수자 혐오와 극우에 반대하는 기층 운동이 필요하다.



극우는 동성애 혐오로 청소년들의 불만을 딛 데로 돌리려 한다.

학교를 파고드는 극우의 전술

극우는 교육과 학교 영역에 파고들어 성소수자 배척과 혐오를 퍼뜨리는 전술을 써 왔다.

지난 대선 직전 폭로된 리박스쿨 사건은 오랫동안 극우들이 초등교육에 침투해 극우 이데올로기를 퍼뜨려 왔음을 보여 준다. 리박스쿨은 이승만과 박정희를 찬양하는 극우 역사관뿐 아니라 낙태 반대, 동성애 반대 교육도 적극적으로 펼쳤다.

극우들은 주로 보수적 학부모 단체를 조직해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활동을 벌여 왔다. 또한 성소수자나 페미니즘 친화적인 책을 학교 도서관에서 퇴출시키는 활동도 해 왔다. 여기에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도 포함됐다.

이는 전 세계 극우들의 오래된 전술이기도 하다. 가장 유명한 역사적 사례는 1980년대 영국 마거릿 대처 정부가 제정한 지방정부법 제28조다. 이 법은 학교에서 동성애를 “부추기는” 우려가 있는 모든 조치를 금지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기독교 우파 가정들을 중심으로 LGBT+ 관련 성교육을 하는 날에 자녀를 등교시키지 않는 방식의 항의 행동이 조직되고 있다.

극우는 왜 학교에 파고드는가? 먼저 동성애 혐오를 이용해 청소년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한다. 특히 남성 청소년 사이에서는 ‘남성답지 못한’ 또래를 조롱하고 따돌리는 분위기가 확산되기 쉽다.

청소년의 성은 도덕적 패닉을 부추기기 쉬운 민감한 쟁점이기도 하다.

그래서 극우는 성소수자 문제를 조기 성애화, 소아성애, 성범죄 증가, 가족 붕괴 등과 연결하며 공포심을 조장한다. 1980년대 영국 지방정부법 제28조 옹호자들의 주요 데마고기는 게이 남성을 소아성애자로 묘사하는 것이었다.

청소년의 성과 성교육 문제를 둘러싼 보수적 정서는 정치적 극우 세력을 넘어 사회 전반에 적잖이 존재한다. 윤석열 쿠데타 기도 전까지만 해도 정치극 극우는 그리 중요한 행위자가 아

니었으나, 이들이 조직한 퀴어퍼레이드 반대 집회는 매년 수만 명 규모로 열렸다.

극우는 바로 이 점을 파고들어 자신들의 의제로 대중을 동원하려 한다.

또한 극우는 이런 전술을 퍼서 청소년 ‘일탈’이나 가족 위기 같은 문제의 책임이 마치 성소수자에게 있는 것처럼 왜곡해 진짜 문제의 본질을 가리려 한다.

극우 세력이 ‘동성애=에이즈 확산=건강보험료 인상’이라는 도식을 내세워 현실을 왜곡하는 것 역시 평범한 대중의 불만을 자극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극우의 이런 혐오 선동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삶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올해 4월 발간된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성소수자의 71.1퍼센트가 교사에게, 87퍼센트가 또래 학생에게 편견이나 혐오 표현을 경험했다.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교

오늘날 트랜스젠더 권리 지지가 중요한 이유

세계적으로 극우는 트랜스젠더 공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은 트럼프다. 그는 2기 정부 출범 직후 “성별은 남성과 여성뿐”이라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하고, 트랜스 청소년들의 의료 지원을 중단하고, 스포츠에서 트랜스 학생을 배제했다. 이런 공격은 트랜스젠더 삶 전반을 겨냥한다.

한국의 반성소수자 극우도 갈수록 트랜스젠더 쟁점을 데마고기에 이용하고 있다. “여자 목욕탕에 남자가 웬 말인가” 하는 식이다. 이번 서울 퀴어퍼레이드 반대 집회의 요구 중 하나도 ‘성 전환 수술 없는 성별 변경 반대’다.

트랜스젠더는 출생 시 지정받은 성별과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이 다른 사람들이다. 그래서 많은 트랜스젠더들은 이름, 복장, 외모 등 성별 표현을 바꾸고자 한다. 일부는 의료적 조치나 수술을 통해 신체를 바꾸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동성애자들보다 더 잘 드러날 수 있고, 더 많은 혐오에 직면한다.

트랜스젠더의 존재는 이 체제의 ‘상식’ 즉, 성별은 태어날 때 정해져 평생 바뀌지 않으며 남성과 여성은 각자 정해진 역할이 있다는 생각에 정면으로 도전한다. 그 상식은 극우가 결사적으로 지키려 하는 성별 질서다.

올해 퀴어퍼레이드 반대 집회(그 핵심에 극우가 있다)의 슬로건은 “남녀의 결혼, 건강한 대한민국”이다.

극우는 “아동 보호”, “여성 안전”, “건강한 나라”를 트랜스젠더 공격의 명분으로 삼는다. 그러나 극우가 그런 문제에 진정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트랜스젠더에 대한 공포심을 부추기는 데 이용할 뿐이다. 그럼으로



“트랜스 여성은 진짜 여성이다”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을 정의할 권리를 지지하자

써 그들은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 체제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을 영똥한 곳으로 돌리려 한다.

극우가 강화하고자 하는 성별 고정관념, 혐오, 사회적 안전망 약화는 오히려 여성과 아동을 더 취약한 처지로 내몬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는 핵심 시스템은 가족 제도다. 가족은 다음 세대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사회화한다. 그 덕에 자본주의 체제는 엄청난 비용을 줄인다. 이를 위해 성별 고정관념과 가족주의 이데올로기가 끊임없이 동원된다. 극우가 지키려는 상식과 질서는 자본주의라는 계급 사회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트랜스젠더 권리를 반대하는 것은 비단 극우만이 아니다.

중도좌파를 자처하는 영국 노동당 정부도 ‘여성이란 생물학적 여성’이라

는 생각을 제도화하려고 한다. 자유주의자들과 좌파 일부도 트랜스젠더의 젠더 정체성을 부정하는 이들이 많다. 그들은 인간 성을 오직 생물학적 성으로 환원한다.(이게 관한 비판은 본지 웹사이트에 실린 ‘유물론이란 무엇인가 - 성과 젠더에 대한 생물학적 결정론 비판’을 보라)

한편, 페미니즘 운동 일부에서도 트랜스젠더 권리와 여성의 권리가 대립된다는 생각을 공유하며 트랜스젠더를 배척한다.

이런 혼란과 문제적 타협은 극우가 트랜스젠더 혐오를 마치 여성 권리 보호인 양 포장하며 위선을 부리기 쉽게 만든다.

오늘날 그저 자유주의적 관용이나 권리 담론만으론 차별에 맞서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첨예한 상황에서 이 권리와 저 권리가 충돌하는 것으로 보이기 일쑤이고, 무엇보다 체제의 우선

순위가 차별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진정으로 보장할 여지를 계속 갉아먹기 때문이다.

여성 차별과 트랜스젠더 혐오는 모두 이 자본주의 체제에 뿌리박혀 있고, 둘 모두 성별 규범과 차별에 맞선 투쟁의 전진 속에서만 일부 완화될 수 있다.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을 정의할 권리를 지지해야 한다. 그 권리에는 지금 한국 트랜스젠더들이 요구하는 조건 없는 법적 성별 정정, 의료적 트랜지션에 건강보험 적용, 주민등록번호에서 성별 표기 삭제, 성중립 화장실 등이 포함된다.

트랜스젠더 방어의 철학적 기초

알렉스 캘리니코스 강연:

유물론이란 무엇인가

성과 젠더에 대한 생물학적 결정론 비판



▶ 1면에서 이어짐

사를 만나지 못했다고 답한 청소년도 48.6퍼센트에 달한다.

극우가 학교에 깊숙이 파고든다면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더욱 위험한 처지로 내몰릴 것이다.

이에 맞서 저항하는 일은 중요하고 또 가능하다. 성소수자에게 우호적인 정서는 지난 20여 년간 꾸준히 늘었다. 특히 젊은 층에서 증가세가 가

팔랐다. 이러한 정서를 기층 운동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영국 지방정부법 제28조가 도입됐을 때, 교사와 학생, 성소수자와 비성소수자 모두 힘을 합쳐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는 성소수자들에게 큰 자신감을 줬다. 지속적인 기층 투쟁 끝에 지방정부법 제28조는 2003년 폐기됐다. 특히 교사 노동자들의 성소수자

학생 지지와 투쟁이 결정적이었다.

성소수자 혐오는 자본주의가 조직되는 방식, 특히 가족 제도와 긴밀히 연관돼 있다. 극우는 이성애 중심 가족 제도가 노동력 재생산에 필수적이고, 사회 통제에도 용이하다고 여겨 이를 수호하려 한다.

따라서 성소수자 차별 반대는 단지 개인을 관용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

닌다. 동성애자에게 이성애자와 동등한 혜택(결혼, 건강보험 등)을 주는 일, 의료적 트랜지션(성별 정정)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일 등은 이데올로기적 문제일 뿐 아니라 재원을 둘러싼 물질적 문제이기도 하다.

이는 성소수자 차별 반대 운동이 자본주의에 맞서는 계급투쟁과 더 긴밀히 연결돼야 함을 뜻한다.

프라이드는 저항이다

극우와 트랜스 혐오에 맞선 세계 성소수자 투쟁

6월 13일 서울 퀴어퍼레이드를 앞두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성소수자들의 저항을 소개한다.

세계 곳곳에서 극우는 트랜스젠더와 성소수자를 희생양 삼아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와 아르헨티나 대통령 밀레이 등이 가장 앞서 있다. 그러나 영국의 노동당 정부도 트랜스젠더를 배신하고 있다.

하지만 성소수자들은 거리와 광장에서 이에 맞서고 있으며, 사회운동 활동가와 노동조합원들, 좌파 등과 연대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은 프라이드가 단지 축제만이 아니라 차별과 억압에 맞선 저항의 장임을 보여 준다.



올해 2월 7일 극우 정부에 맞서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반피시스트·반인종차별 프라이드 행진'

아르헨티나 극우 밀레이 정부의 혐오와 긴축에 맞서 20만 명이 참가한 프라이드 행진

올해 2월 7일, 아르헨티나에서 극우 정부에 맞선 '제2차 반피시스트·반인종차별 프라이드 행진'이 열렸다. 아르헨티나 전국 26곳에서 최소 20만 명이 참가했다. "파시즘에 맞서: 연대를!", "누구도 남아도는 사람이 아니다"가 핵심 구호였다. 노동계약 반대도 중요한 요구였다.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로 불리는 극우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가 지난해 1월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젠더 이데올로기를 '아동 학대'와 연결하고 성소수자를 '소아성애자'라고 비난하자, 아르헨티나에서는 이에 즉각적으로 맞서 '제1차 반피시스트·반인종차별 프라이드 행진'이 열렸었다.

그러나 밀레이는 공격을 멈추지 않

았다. 지난해 2월 성별정체성법을 개정해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의 호르몬 치료 등 젠더 확정 의료 접근을 막았다.(현재 여러 소송과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린 상태.) 아르헨티나의 성별정체성법(2012)은 당사자의 의사만으로 법적 성별 변경을 허용한 세계 최초의 법으로, 당사자들의 오랜 투쟁과 동성혼 합법화 등을 이룬 대중운동의 산물이었다.

또한, 밀레이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의 최소 1퍼센트를 트랜스젠더·논바이너리에게 배정하도록 한 노동할당제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제도로 채용된 노동자 일부는 오히려 해고됐다.

무엇보다 밀레이 정부가 추진한 혹독한 긴축이 성소수자 등 취약한 처

지의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 보건 예산이 대폭 삭감돼 호르몬제나 HIV 치료제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졌다. 이날 2차 행진에 성소수자뿐 아니라 장애인, 은퇴자, 이주민이 대거 동참해 "이 예산은 사람을 죽인다"고 외친 이유다. 행진 대열에는 팔레스타인 깃발들도 있었다.

한편, 이날 행진은 밀레이 정부가 하고 보상금을 축소하고 파업권을 제한하는 등의 노동개혁법('노동현대화법')을 밀어붙이는 와중에 이뤄졌다. 활동가들은 이미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성소수자 노동자들이 이중의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행진에 참가한 교사이자 트랜스젠더 활동가인 키메이 라모스는 이렇게 말했다.

"노동개혁은 노동자 민중을 공격하는 것이고 성소수자들은 노동하는 민중의 일부입니다."(〈오할라〉 재인용)

노동조합들도 행진에 참여했다. 주요 노총을 포함해 교사, 대학 교원, 공공부문 노동자, 언론 노동자, 항공 노동자 등이 합류했다. 대열 선두에서는 "[노동개혁은 통과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구호가 외쳐졌다. 이날 행진에서 좌파들은 노동개혁에 맞선 총파업을 호소했다.

지난해 1차 행진이 밀레이의 혐오 발언에 대한 즉각적이고 폭발적 항의였다면, 넉 달 전 2차 행진에서는 이에 더해 노동조합과 좌파 단체들의 개입이 좀 더 뚜렷해지며 계급적 요구가 부각됐다.

영국 극우의 프라이드 예산 끊기에 맞선 노동조합과 성소수자들의 연대

극우 정당인 영국개혁당이 더럼 카운티 지방의회를 장악하며 더럼 프라이드 행사 지원 예산을 끊었다. 더럼 카운티 의회 부의장 대런 그라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프라이드는 오래 전에 젠더 이데올로기의 광고판이 됐다", "[납세자는] 논쟁적 사안을 위한 현금 인출기가 아니다."

그러자 노동조합들이 나섰다. 영국 노동조합회의(TUC), 더럼 광부협회(DMA), 공연예술노조(Equity), 기관사·철도승무원노조(ASLEF), 통신노조(CWU), 교사노조(NASUWT) 등이 더럼 프라이드를 지원해 기존 지원금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을 모았다.

더럼의 '인종차별에 맞서자'(SUTR)

활동가 존은 이렇게 말했다. "노동당이 지방의회를 운영할 때 프라이드에 2,500 파운드를 지급하곤 했습니다. 노동조합들은 그 10배를 모았습니다."

올해 행진 규모도 지난해의 2배나 돼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무지개 깃발만큼이나 노동조합 깃발이 많았다.

추천 책

트랜스젠더 차별과 해방
로라 마일스 외 지음, 정진희 역음
책갈피, 184쪽, 9,000원



지난해 4월 19일 트랜스젠더 공격에 맞서 열린 런던 시위

영국 “트랜스 여성은 여성이다” : 가장 효과적인 영국 트랜스+ 방어

지난해 4월 영국 대법원은 평등법(차별금지법)상 여성을 생물학적 성별로 한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트랜스젠더를 겨냥한 이 공격은 곧바로 저항을 촉발했다. 판결 사흘 뒤인 지난해 4월 19일, 런던 도심에서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트랜스 여성은 여성이다”를 외쳤다. 다른 여러 도시에서도 수백에서 1,000명 규모로 시위가 벌어졌다.

올해도 이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올해 5월 21일 영국 노동당 정부는 평등인권위원회(EHRC)의 새 평등법 실무 지침 초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지침은 개악된 평등법에 따라 트랜스 여성을 여성 전용 공간에서 배제하고, 여성 단체가 트랜스 여성의 가입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기관 전반에 트랜스젠더 혐오를 제도화하려는 시도다.

올해 5월 23일에는 평등인권위원회 지침에 항의하는 집회가 의회 광장에서 열렸다.

노동조합도 움직이고 있다. 공공서비스노조 유니슨(UNISON)은 올해 2월 트랜스+ 권리 방어 결의를 통과시켰고, 5월에 새 지침이 발표되자 조합원들에게 현장 사례를 모아 달라고 요청하며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학·칼리지노조(UCU)도 5월 27일 전국대회에서 개악된 지침에 반대하는 입장을 채택했다.

영국의 반자본주의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는 노동조합원들이 직장에서 사용자들의 개악된 지침 채택을 막아야 하고, 채택된다고 하더라도 집단적으로 거부해 현장에서 무력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7월 25일에는 런던에서 트랜스+ 프라이드가 개최될 예정이다. 주최 측은 올해의 주제를 “우리의 미래, 우리의 투쟁”으로 정했다. ‘프라이드는 저항이다’를 내세우는 런던 트랜스+ 프라이드는 2019년에 시작돼 해마다 성장했다. 올해에는 10만 명 이상 참가가 예상된다.

미국 “트랜스 청소년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트럼프의 공격에 맞서

트럼프와 공화당 주정부들의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 공격에 맞선 크고 작은 저항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1월 13일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앞에서는 트랜스 학생의 학교 스포츠 참가 권리를 둘러싸고 맞불 집회가 벌어졌다. 대법원이 웨스트버지니아와 아이다호의 트랜스 학생 스포츠 참가 금지 법안을 심리하자, 트랜스젠더 권리 지지자 수백 명이 트랜스 학생 선수 베키 페퍼-잭슨 등을 지지하기 위해 모였다. 반대편에서는 우파 단체들이 비슷한 규모로 맞섰다.

2월 17일에는 젠더해방운동(GLM)과 성소수자 운동 단체 액트업의 활동가들, 트랜스젠더 자녀를 둔 부모 등 50여 명이 보건복지부 본부를 봉쇄하는 투쟁을 벌였고 25명이 체포됐다. 이들은 트랜스 청소년의 젠더 확정 의료를 사실상 차단하려는 보건복지부 규칙안에 항의했다. 이들은 “우리의 호르몬에 손대지 마라”, “트랜스 청소년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하고 외

쳤다.

이 행동은 트럼프 정부가 “아동 보호”라는 거짓 명분으로 트랜스 청소년 의료를 공격하는 것에 맞섰다. 트랜스젠더 자녀를 둔 어머니 크리스틴 클리포드는 <더나인틴스>에 이렇게 말했다. “젠더 확정 의료는 10대 트랜스 청소년들의 생명을 구합니다. 저는 그것이 제 아이들의 생명도 구했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2월 6일 캔자스에서는 트랜스젠더와 지지자 약 50명이 출생 시 지정 성별에 따른 화장실 이용을 강제하는 주법을 비판하며 주의회 의사당에서 불복종 행동을 벌였다.

3월 28일 미국 전역에서 벌어진 ‘왕은 없다’ 대규모 시위에서도 성소수자는 중요한 일부였다. 주최 측 추산 3,300곳 이상에서 800만 명이 참가한 이 거대한 반트럼프 시위는 주로 이민자 탄압과 전쟁에 반대하는 동원이었지만,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 권리 방어 구호도 함께 외쳐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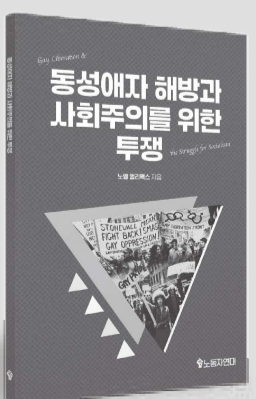
신간

동성애자 해방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

노엘 핼리팩스 지음, 이원웅 옮김, 2026년 6월 8일, 80쪽, 노동자 연대



PDF 무료 배포



노동자 연대 ws.or.kr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읽어보세요.

- ★ 6.3 지방선거와 재보선 결과, 위기에 처한 여당
- ★ 극우의 “재선거” 요구에 동조하지 마라
- ★ 마르크스주의, 섹슈얼리티, 그리고 해방을 위한 투쟁
- ★ 알렉스 캘리니코프 강연: 유물론이란 무엇인가 — 성과 젠더에 대한 생물학적 결정론 비판 등

